

2017년 2월

지면소개

Vol. 28

- 02 제348회 임시회 개회
- 06 도민의 목소리
- 08 수상을 축하합니다!
- 09 법제 정비 프로젝트
- 10 입법정보
- 12 사무처 소식 / 의회 홍보

제주의정소식

Dreamjeju21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발행일 2017. 2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전화 064-741-2235 | 팩스 064-741-2219 | <http://www.council.jeu.kr>



봄이 오는 제주

제주의 땅에서 바람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번산바람꽃이 두터운 땅을 헤치고 피어납니다. 나무도 꽃도, 그리고 들길의 풀잎도 지난 겨울 봄을 준비하며 다져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늘 깨어있어 준비하고 대비하는 도민의 의회입니다. (사진 / 권기갑)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본격 돌입

제348회 임시회 7일 개회, 10일간 열려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월 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교섭단체대표 연설,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7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2월 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새해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도의회 각 교섭단체대표 연설,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진다.

2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와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모든 아픔, 꿈 같이 사라지고 희망 오길 기대한다”

신관홍 의장, 개회사에서 밝혀

신관홍 의장은 2월 7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원망과 불신, 국민 모두가 국가권력의 진공상태에 빠지면서 가져야 했던 절망감, 그리고 혼란한 정국과 부동산, 물가, 금리, 중국관광객 감소 등 어려운 지역경제로 인해 ‘상심과 걱정’으로 대변되는 설 명절에 나타난 제주 민심들이 윤광석 시인의 ‘봄’의 구절처럼 이 모든 아픔, 꿈 같이 사라지고 희망의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지난 한 달 동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결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현안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가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가 아닌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도민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정유년 한 해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 의장은 또 원희룡 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하겠다”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전환기 도지사로서 도정 현안업무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제주현안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지금 제주는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 오라관광단지

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갈등,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부채와 가계대출, 인구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교통·하수처리난, 청년 실업,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많은 현안에 쫓겨 있다.”고 토로하기도.

신 의장은 이어 “올해는 도정이나 교육행정, 우리 제10대 도의 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강조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장은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실제적 진실을 외면하고,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제주도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범도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제주항공이 직원의 반발과 제주자치도의 중재에도 아랑곳없이 콜센터를 폐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주항공과 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제주콜센터 폐쇄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제주를 비켜간데 대해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하고 “그동안 AI 차단에 밤낮없이 애써 오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충북 보은군에 쯤스 구제역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 패처럼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차단에 진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도민불편 근본적 해결책 제시하는 해 될 것”

원희룡 도지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 인사말



원희룡 지사는 2월 7일 열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로 겪는 도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도정에서 제 때에 대비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GRDP 성장률과 고용률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쓰레기와 교통 및 주차, 상·하수도, 부동산 등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정에서 제 때에 대비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래서 도민 불편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쓰레기배출제와 대중교통 개편안 등을 통해 ‘생활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신화역사공원을 시작으로

넓혀 나가고, 비정규직 비율 문제 해소와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제주 해녀문화를 비롯한 제주의 문화와 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올해를 ‘에너지 신산업 도약의 해’로 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가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밖에도 원 지사는 내년이 ‘제주4·3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제가 먼저 제주 곳곳의 갈등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며, “제주도정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민의 주도권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육 7대 희망정책을 제시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 인사말



이석문 교육감은 2월 7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이 “훈더거넴팀” 운영을 더욱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위기 학생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하겠다.”며, “기초학력향상지원단”을 운영해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향상시키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제주형 교육복지’ 기반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 동아리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 주제탐구 동아리와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을 의무화해 1학생 1스포츠와 100세 시대 체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이 교육감은 “학교 수영장을 신설하고, 노후 수영장을 개보수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 학기에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다.”라며, “3월은 공문 없는 달”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교육 과정 지원팀을 구성, 운영해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다.”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와 제주어를 기반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 파견 근무를 확대해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과정평가’에 대비하겠다.”라며 “진학범위 ‘인 아시아(In Asia)’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학교를 동시에 연결한 글로벌 화상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희망 정책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승화되는 기쁨은 ‘아이들의 등하갓길’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며, “새 학기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등하갓길이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동욱 의원은 2월 7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제조기반이 없는 제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이란 지역의 주요한 소득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축을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성동구청과 마포구청을 방문해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논의체제를 둘러본 것을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논의가 사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일부 있기에 개인의 이익에 앞서 지역공동체의 상생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의 명확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하며, 공론화하는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권이나 지역 활성화는 기존 상인 및 지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적 산물이기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성장의 과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방안 마련해야”



유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은 2월 7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도 의회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고, 원 도정이 야심차게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을 하셔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2017년 본예산에는 지사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0만원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제주도 인구가 66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3.9%로 해마다 늘고 있고, 장애인이 5.4%로 약 20%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구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지구 2개소인 화북지역과 법환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여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범지구 선정 및 정비계획 등이 위원회 회의를 걸쳐서 결정되어야 하나 선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혜택도 명확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도시계획/공원조성 등의 타 사업부서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강제성이 없어 사업비 부담에 따른 적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담당업무 조직을 만들어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착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하며, 더 강제성 띤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해녀 업무 총괄할 제주해녀유산센터 신설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은 2월 7일 속개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해녀유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 의원은 “제주의 해녀는 제주의 보물이자 역사이며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었던 살아있는 문화재”라며, “우리 사회가 변하고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인공지능이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해녀는 자연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공존하고 있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의 해녀는 지난 1970년대 1만4,000여명에서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4천300여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 69%가 감소한 수치”라고 우려하며, 다만 “제주도정은 이러한 해녀들을 위해 인력 양성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마련한다고 하니 명실상부 제주 해녀가 국내외 유산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해녀 관련 업무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하려면 이에 걸 맞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며, “현재 해양수산국의 해녀관련 업무는 수산정책과에서 해녀 복지, 소득보전, 조업환경, 생업지원 등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해양산업과에서는 국내외 유산관련 업무, 문화 콘텐츠 관련 업무, 해녀박물관에서는 전시 및 공연 등의 업무를 보는 등 다원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해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진단했다.

좌 의원은 “때문에 해녀관련 업무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해녀유산센터’를 신설해 제주해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

교섭단체대표 연설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제주 특별법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348회 임시회 원내대표 연설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청산과 새로운 미래의 건설은 우리 제주 입장에서 특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원희룡 도정에 대한 준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최상위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로부터 제주를 갈등으로 몰고 왔던 개발시대의 적폐청산이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는 공통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로 시험대에 올랐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되었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도정 스스로 세운 미래비전에서 유독 ‘예외’가 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문제, 강정문제,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장 오염수 바다 방류, 거리와 골목에 넘쳐나는 차량 등 제주는 지금 급격하게 불어오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내는 행정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세류성해(細流成海), 작은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현장의 작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도정의 원대한 목표를 일궈가는 도백이 되어주시길 고연드린다.”면서, “그것이 바로 원 지사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큰 정치의 지름길은 아닌지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또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정에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첫째, 세계사의 변화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반영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제주 특별법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한 예산 정책 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주도 복지예산 20% 진입을 원희룡 도지사께 제안한다.”

“셋째, 4·3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차원의 운동만 아니라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제안드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2017년은 ‘이게 나라냐.’로 일갈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그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합니다.”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주에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348회 임시회 원내대표 연설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바른정당 강연호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강 대표는 “제주에서부터 진영을 초월해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공존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고 말하고, “10대 제주도의회에 등원하면서 가졌던 도민을 위한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서, 도민을 위하는 일에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2015년 당시 교섭단체 대표로서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면서, 다음의 6개 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 대표가 밝힌 6개 항의 약속은 “첫째,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이다.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관점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농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산업 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다하겠다.”

“둘째, 대다수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눈 앞에 보이고 피

부로 크게 느끼는,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도록 하겠다.”

“셋째, 관광산업의 비중이 61.7%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진 데다 연간 총생산액이 15조원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의 과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를 찾던 중국관광객이 주춤하면서, 제주관광에 비상이 걸렸다. 하루빨리,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외 지역에 대한 홍보마케팅과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다각화·다변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넷째, 소외계층과 제도권 밖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찾아내서야 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모델’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산남·북과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쉽 없이, 도정과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강연호
의원



“반성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임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 천 문
의 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해서 대통령 직위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지만, ‘반성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 김천문 대표가 서면으로 제출한 대표의원 발언에서 이처럼 무겁게 서두를 꺼냈다.

김천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 ‘연못가의 풀들은 봄꿈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벌써 가을을 알린다.’ 라는 주자의 권학문 한 구절을 상기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저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가가 혼란스럽고,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더 안정화하여 더 강해져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 즉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첫째, 지방자치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대명제 아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전통시장 특성화·차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고품질 감귤생산 및 유통 혁신 체계 구축 ▲발작물 자조금 조성으로 수급조절·가격안정화 ▲제주형 어촌·어항 특화개발로 어촌경제 활성화 ▲제주관광 질적 성장 추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4·3 피해자 배·보상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도정의 2017년도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인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대중교통체계 및 주차정책 ▲제주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를 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은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2017년도 역점과제인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평화·인권교육 강화 ▲학생 동아리 활성화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협력과 견제할 부분은 견제를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사고, 태풍 등의 피해가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알고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선제적 예방대응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면발언을 마쳤다.

“교육의원제도 존폐 논의, 지방교육자치 역행”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놓고서 마치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고 보려는 것처럼 왈리왈(日梨日栗)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하며,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원내대표 연설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미래제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부공남 미래제주 원내대표는 현 시국과 관련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론이 모아지지 않아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다. 부디 올 한해 신의 가호 아래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정의로운 것이 중심축이 되어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원한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부 대표는 요즘 일고 있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절대적 필요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놓고 왈리왈(日梨日栗)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

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부 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도를 폐지, 또는 의원 수 감축을 논의의 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하여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부 대표는 또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등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함에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제주지역에 여중학교 신설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며, “무엇이 시급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 대표는 또 “학교 다목적강당 설립과 관련해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다목적강당 설치를 못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다.”면서, “보다 합당한 교육균형발전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 대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모든 교육가족에게 조금도 의심 받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미래제주

부 공 남
교육의원



도민 기고



괜찮아, 청춘이야

김윤주
자영업, 아라동

청년실업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젊은 청춘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고 경제는 1990년대 후반 IMF를 방불케 한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에게 얹혀사는 쟁거루족 또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 또한 대학졸업 후 본격적인 취업이라는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반 이상의 시간을 도서관에 앉아 취업이라는 녀석과 싸움 해도 도무지 감감한 암흑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

20대 초반, 한국사회의 답답함과 더불어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의 열정과 능력으로 나를 평가했다. 호주에서 내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많은 월급과 복지를 누릴 수 있었다.

그곳에선 나의 노력이 곧바로 결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았기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높았다. 여유시간도 많았기에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어서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자신감을 얻어 호주에서 귀국하자마자 호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뉴욕으로 일을 하러 떠나게 됐다. 뉴욕에서의 삶은 준비가 덜 되었던 호주에서의 삶보다 더 빨리 탄탄해졌고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비록 농촌에서 자라왔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사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인내와 끈기,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에 내 인생은 지금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인 취업전쟁에 뛰어들고 나서 나는 인생의 슬럼프를 겪어야 했다.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다.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이곳저곳 많이 지원을 했지만, 열 곳 중 1차 합격한 곳은 단 한 곳. 하지만 그마저도 최종합격까지는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관문이 남아있었다. 제주에 사는 나는 계속해서 서울을 집 드나들 듯 해야 했으니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었다.

과연 나는 무얼 위해 이렇게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합격



을 하더라도 과연 나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아마도 취업난에 이미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과거 행복했던 외국에서의 진취적인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 이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대한민국에서 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창업을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창업 후의 5년 계획과 10년 계획도 작성해 봤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만류했지만, 세밀하게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한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 덕에 나의 의지는 현실이 됐다.

최종 목표를 외식사업 전문가로 잡고 실무경험을 위한 카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외국에서의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브런치와 착즙음료를 추가했다. 타겟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위치 선정과 메뉴 선정에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결과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2호점을 계약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취업준비만 했다면 1년 반이 지난 지금 나는 그대로 도서관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인생에서 투자와 모험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열쇠임에는 틀림없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지금 나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임금을 스스로 받고 있고 미래를 꿈꾸며 나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끈이 생겼다.

혹시라도 나만의 아이템을 가진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취업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인생의 설계도를 과감하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

**** 도민 기고는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난개발을 걱정하며

김현정
소식지 '청년' 편집위원장



야트막한 돌담을 사이에 두고 할머니께서 이웃집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 마당 한 가운데에서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달고 물줄기 공격을 하고 있는 사촌동생 형제가 사뭇 분주하다. "뭉험시! 경 더우민 바당에 강 놀라게."

할머니의 불호령으로 함께 놀고 있던 동생들은 좁은 골목을 돌아 탐동 바다로 향한다. 어릴 적 추억이 묻어있는 무근성의 풍경이다.

그 시절 탐동 앞바다엔 속웃만 걸쳐 입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한여름의 바다에는 살빛과 옥빛이 공존했다. 가끔은 그림자. 지금 내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천연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바다가.

2017년의 탐동을 거닌다. 물론 어릴 적 살던 집터는 '여긴 어디? 난 누구?'의 우스개 질문을 던질 만큼 달라져 있다. 야트막한 돌담의 풍경도 추억 속이다. 탐동 앞바다의 파도는 어릴 적 검은 바위 위에서 부서지는 포말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멘트벽과 삼밭이에 충돌 사고라도 나듯 파도가 치고 빠진다. 사람의 발걸음보다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편안해 할 도로 위다. 바다 조망의 권리라도 누리듯 즐비하게 늘어선 호텔들이 해안선의 100미터만 넘어가도 그 넓은 바다와 이별하게끔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개발의 일장일단의 모습이다.

어릴 적 순수함이 그리울 때마다 산과 바다, 어느 곳 하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길 위를 달려본다. 곳곳이 로드무비를 찍는 느낌의 경관이지만 근래 들어 해안도로에도 일렁이는 파도를 소리모만 들어야 하는 곳이 많아진다. 가끔 해안도로를 따라 늦은 속도로 바다를 감상하며 달리던 낭만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 시점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도 관광협회 자료/2016년도 제주를 찾은 국내의 관광객은 총 1,585만 1,401명에 달하고, 그 중 외국인인 3,598,689명에 달함.) 그 관광객들을 의식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산책로가 아름답던 한담동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한 카페촌이 형성되었고, 애월 해안도로도 바다를 찾는 것인지 커피숍과 숙박업소를 찾는 것인지 모를 사람들로 북적댄다. 그들의 시야에 바다는 한낱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불과하다. 짠 내음 없는 커피향의 바다가. 기준에 따라 호와 불호를 나누는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이 바다가 아쉽다. 동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월정리 해안은 한 해가 다르게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제주의 변화는 하루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중산간도 예외는 아니다. 능선을 따라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를 숙박 시설의 난무함으로 산은 점점 천연의 의복을 벗고 있다. 외국 자본 유치 사업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지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로 주변의 흥물로 지목되는 아네티리조트도 그 한 예이다. 이 리조트는 중산간에 위치해 경관 파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도 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어떤 이는 제주의 허파인 꽃자왈을 지키고자 생계 이외의 모든 활동을 여기에 봉사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를 파괴하는 사업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야기하고 있다.

과연 개발과 난개발의 불분명한 선상에서 우리의 제주는 이대로 지켜주지 않아도 백년지계를 꿈 꿀 수 있을까?

관련 법 개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무수히 많은 걱정의 목소리마저 무의미하게 들릴 만큼, 지금의 제주는 위험 수위의 환경파괴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만큼은 건축물이 아무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원시적인 바람이 앞선다.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중산간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속도로 산 빛을 잃어 가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도에서 어려운 난개발에 따른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난 후의 결과물이었겠지만(이렇게라도 위안하지 않으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원망할 지도 모를 일이기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 해도 초록을 잃어가는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에도 심한 상처를 주고 있다.

자존심 회복 또한 우리의 몫이기에,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가 걱정 수위에 있다면 하루 빨리 이에 따른 대안과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코흘리게 적 그 신선한 모습의 무근성 앞바다는 그리움에 묻어두더라도 오늘이 내일의 추억이 될 시간 앞에 더 이상의 난개발 없이 지금의 풍광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또는 그 아이들이 커서도 지금의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행정 정책이 갑이고 그 정책을 따르는 도민이 을이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제주를 지키기가 어렵다. 다양한 도민 층과 머리를 맞대고 환경문제든 난개발 문제든 다른 기타 문제도 서로 열어놓고 토론하고 맞대고 공감하면서 나가야 가장 바람직하고 풍요로운 제주로의 영속성을 유지하리라 생각한다.

마뚝잡은 줄고를 내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함께 고민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바다 바람 그리운 주말의 행복을 기원해본다.

**** 도민 기고는 제주특별자치도회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드리는 글



왕천천(王天泉)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조교수

세월은 물처럼 덧없이 흐르고 흘러 무심코 되돌아보니 제주도에 온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8년 동안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해 한국학 박사 학위를 얻는 위치에 이르게 됐고, 소속감이 없던 외국인에서 영주권을 받아 제주도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천리를 가는 속도 같이 몇 년에 걸친 제주도의 큰 발전과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내게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좌절과 답답함을 동시에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섬에 많은 기대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인 신분으로 제주에 온 후 경험했던 몇 번의 선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서부터 도지사, 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까지 제주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민주사회에서 선거제도의 역할과 영향이 어떤지 충분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 기간에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심지어 길에서도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후보자가 찾아와 허리 굽혀 인사하며 명함을 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한국에 옹화돼 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친절하게 교통질서 유지에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4계절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안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봉사활동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도의원 선거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도의원이었습니다. 또다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는 도심지역으로 도의원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있습니다. 나는 딸아이 학교의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어쩌면 그 분에게 투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의 행동은 진정으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선거를 위해 4년을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고 경이로운 행동입니다.

나는 한국에 선거제도가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관료주의 현상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관료들이 서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권력은 감히 거만을 떨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차를 향해 절을 하면서 표를 얻는 게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민원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근 제주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도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많은 논란을 유발했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개입해 문제의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선 도의회가 존재하기에 제도적으로 정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기에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라(为人民服务)”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빈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을 당연히 지적해야 할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 한국의 선거제도에 실제 많이 고쳐야 할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 없는 여야 간의 갈등, 경직된 관료체제, 멈추지 않는 부정부패, 심각한 포퓰리즘 추세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표는 그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피하는 것만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의 정문 앞에 무장한 병사가 없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부청사를 드나들 수 있으며,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는 농부들이 한 트럭의 양파 등과 같은 작물을 가져와 도청 입구에 버려도 잡혀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정치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국민들이 퇴진시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앞길이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 특히 제주도에도 답답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에 많은 중국 관광객과 자본이 들어오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심지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년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3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정체돼 있는 한국전체의 경제상황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경제는 날로 상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교통, 환경, 거주 등과 같은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시하고 무조건 다 중국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작년에 도지사의 TV 토론 중에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망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말들은 제주도내의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중국인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제주의 부동산에 중국인들이 투자하기 시작할 때에는 도민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제주도의 땅값, 집값이 오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청은 여론의 요구에 영합하느라 당초 정부가 한 계약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속한 조항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바꾸려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번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 무비자입국 정책 폐지의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매체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면만 보고 보도하는 형태는 황당하기만 할 뿐 정확한 인식이라 보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중국인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보수적이고 너그럽지 않은 편협한 민주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제주도가 보여주는 그런 성향은 행동과 목적이 상반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변화시키려면 제주도가 우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시선으로 생각하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익을 얻으면 분명 그와 상반된 대가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국소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등용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의 상황을 깊고 넓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전국시대에 빈곤하고 외진 지역에 위치해 있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문물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시황을 도와 나라를 통일시킨 이사(李斯)는 「간축객소 諫逐客疏」에서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물건 중에 보배로운 것이 많고,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재 중에 진나라에 충성하려는 자들이 많다.(夫物不產於秦, 可寶者多; 士不產於秦, 而願忠者眾.)”고 했습니다.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고는 제주의정소식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부문 강성균·김경학 의원 ‘우수상’, 김용범 의원 ‘장려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3회 우수조례상 수상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하혜수) 주관으로 2월 4일 명지대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강성균 의원과 김경학 의원이 우수상을, 김용범 의원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총망라하여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개인 및 단체 부분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제13회 우수조례상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동안 이루어진 의원발의 조례 가운데 창의성, 합법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 범위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학회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조례는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과 전국 최초로 제주형 재정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합리적인 재정 관리에 기여한 점, 도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들을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강성균 의원)

-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2016. 5. 16.)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김경학 의원)

- 각종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연계한 재정분석 내실화 등 제주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재정 관련 제도와 연계해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정(2016. 1. 11.), 이 분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임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용범 의원)

- 영상정보화시대에 도민들의 영상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을 높여 문화 격차의 해소와 영상문화를 진흥하고 영상콘텐츠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영상 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2016. 5. 13.)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제13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함으로써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난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는 좌남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김경학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나란히 받은 바 있다.

청렴도 1등급 달성,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대안 제시 등 제10대 후반기 의회 목표 근간 업무추진 로드맵 설정

신관홍 의장, 2월 의정정책회의에서 강조

“2016년에는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의회의 청렴성은 의회 일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업과 공조체계를 갖춰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신관홍 의장은 2월 6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월 의정정책회의에서 2017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각 상임위 별로 비회기임에도 많은 활동을 해줘서 고맙다. 다만, 열심히 한 활동에 대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민 공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회의 일을 도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주의 현안인 쓰레기, 교통,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관홍 의장은 “제10대 후반기 의회 목표인 공감·소통·창조 의정 구현을 위해 각 소관 분야별로 1년간 추진할 업무 로드맵을 설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부과제별로 중점 추진할 사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적인 점검과 문제점 보완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34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존



의 틀에서 벗어나 현장 활동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조례 입법평가 꼼꼼히 실시! 성과 없는 조례 아웃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에서는 올해부터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 동안 조례는 한번 제정되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존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2015년도 박원철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처음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2년이 경과된 조례 98건으로(제정 86건, 전부 개정 12건)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

입법평가는 입법평가분석지표(9개 분야, 30개 세부항목, 6개 입법영향분석 척도)에 따라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도의회 본회의 보고한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게 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는 조례 개정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도민들에게도 공개하게 된다.

신관홍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평가라는 조례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조례 제·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그 동안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이후 실효성 없이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조례를 정리하는 한편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의원발의 조례라는 이유로 시행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제, 의회감사직렬 신설, 야간의회 개최 등 의정역량 강화 방안 제시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2월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지난해 8월 착수되어 올해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이사 이기현)에서 수행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의 연구 사항에 대한 보고와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최종 보고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위원, 집행부 직원 등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향후 10년간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10대 후반기~12대)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제주도의회와 관련한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 도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
- ◆ 상임위원회의 의정역량강화 방안
- ◆ 의정활동 지원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 ◆ 도의회 예산정책 전문성 강화 방안
- ◆ 도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및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방안
- ◆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 방안
- ◆ 대도민 의정홍보 강화 방안
- ◆ 대외 교류협력 및 내실화 방안
- ◆ 도의회 장기적 발전과제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형태를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으로의 전환



신관홍 의장은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에서의 여러 의견을 담아 도의회와 관계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정보



법령 제·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 일부개정 시행 2017.1.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개공지(公開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1.20., 일부개정 시행 2017.1.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공지(公開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정 시설, 농막 등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

공고 2017. 1. 26.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정 시설, 농막 등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며,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도로용지에 물건 적치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로용지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허용 (안 제14조제16호)
도로용지는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와 유사하므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포함하여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확대 (안 제27조의2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생활비용 보조를 받던 세대주의 사망으로 생활보조가 중단되는 경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이 곤란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해서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생활비용 보조 대상으로 함
- 다.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명확화 (안 별표 1 제1호라목)
현재 실외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보아 허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설치로 구역 훼손 및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설치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 허용 (안 별표 1 제1호거목)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실상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을 허용함
- 마.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2호 다목)
폭설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도로부지 인근에 제설시설이 필요하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형시설로 허용 중인 도로 및 광장에 도로부속물인 제설시설(제설제, 제설장비 등의 보관·관리시설)을 허용함
-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잡종지 내에 통로 포장 허용 (안 별표 1 제4호 저목 신설)
구역 지정 전 잡종지 내에는 물건의 적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 포장은 할 수 없어 적치물 손상 등이 발생하므로 구역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잡종지 내 물건 이동을 위한 통로의 포장을 허용함
- 사.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안 별표 1 제5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온실은 타 시설과 달리 시설규모 입지 등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설치에 따른 구조 및 입지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 개발제한구역 내 염전시설(해수)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1))
소금생산에 필요한 시설인 해수(함수저장고)를 농수산물관리 및 관리시설 중 창고에 포함하여 허용함
- 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 (안 별표 1 제5호나목6)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허용함
- 차.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5호마목8))
벼 재배 면적이 100ha 이상, 1000ha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일반지역에 도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000㎡ 이하의 도정시설을 허용함
- 카. 유투비 등 설치주체 확대 (안 별표 1 제5호마목12))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단위가 없는 지역에도 유투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를 종교단체, 지자체로 확대함
- 다.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안 별표 2 제1호차목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택지식 형태로 구분할 후 분양·판매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 분할 허가시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파.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마련 (안 별표 2 제3호다목)
작물 재배사 등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인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정하기 위하여 조례 근거를 마련함
- 하. 이행강제금 산정에 따른 상한규정 삭제 (안 별표 5 제3호가목 삭제)
실효성 있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4. 12. 31)됨에 따라 5천만원으로 설정된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함

국회 의안 정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 : 2017. 01. 31. • 회부일 : 2017. 02. 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그 동안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5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음.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또한 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소득 하위 63%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수급이 되도록 함(안제4조제2항).
- 나. 기초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기반하여 인상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함(안 제6조).

법령 해석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58, 2017.2.1, 교육부]

〈사례 예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이하 "관할지역"이라 함)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해석 결과】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6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중학교 입학방법은 같은 영 제68조에 따른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육특기자의 경우 추첨제로 중학교를 배정하면 체육특기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영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육특기자를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에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정하면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체육특기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때 반드시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만으로는 체육특기자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중학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관할지역 중학교에 체육특기종목이 육성되지 않아 그 관할지역 체육특기자가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학교 배정은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육특기자의 경우 그 특기를 고려하여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제도 · 정책

법 제 처

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화장품법」 등 2월 총 2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65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 생활에 유익한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1. 1.
「공무원임용시험령」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1. 8.
「화장품법」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2. 4.
「민사소송법」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2. 4.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초 · 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버스 · 택시 운전 못해	3. 3.
「식품위생법」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6. 3.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전원 하차 했는지 확인해야	6. 3.
「민법」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6. 3.

□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건강, 스마트폰으로 살펴본다

- '16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범서비스 실시 -

□ 농촌에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의 약 복용여부 등 건강정보를 자녀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산악 등 위험지역에 고립된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조 가능한 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IT기술 기반의 선진 행정체계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2016년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 2017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는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봄서비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구축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초맵과 연계한 u-공유 커뮤니티 구현 등 총 4개이다.
-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부모의 건강 정보를 자녀와 공유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생활건강 인프라를 개선할 전망이다.
-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은 산악지역의 조난자 정보를 119구조대원에게 모바일 위치정보로 실시간 제공하여 구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수출입 위험물 표찰을 비콘(Beacon)으로 대체하여 사고발생 시 위험정보(위험물질 종류, 사고대응 방법, 취급요령 등)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서초맵 u-공유 커뮤니티는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반딧불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택배보관, 공유은행, 장난감 대여 등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생활편리를 제고한다.
- 이들 4개 시범서비스는 2년 동안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률 및 만족도를 검증하여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는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문서24' 이용 시 종이문서 제출 대비 연간 약 48억 원 비용 절감

□ 2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월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 '렌터카 관련 문서' 서비스는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하였다.
-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 문서24 이용자는 제출한 공문을 담당 공무원이 접수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문제출 이력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문서24에서 전자우편 쓰듯이 간편하게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자동 접수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윤종민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 제주(18.03%) 최고 · 대전(2.56%) 최저 상승폭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수도권 : 4.46%, 광역시 : 5.49%, 시·군 : 4.91% 상승
-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과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 한편,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발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신청, 이젠 내 손 안에서

-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다.

-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등 총 12종 서비스
-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16년 기준 방문신청의 약 28% 차지)을 감안해, 이번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모바일을 이용할 때도 PC와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하여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 3월부터 아이폰 사용자도 모바일 브라우저(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이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건 동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건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나 귀직급여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및 배우자에 대한 동의 필요
- 아울러, 신청인이 좀 더 간편하게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는 간편한 UI*를 제공하였다.
- * UI(user interface)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설계
- 기존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외에 「복지로앱」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신청인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는 온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이번에 개설된 「복지로앱」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복지로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 대국민 복지포털
- 아울러, 기존 보육 관련 '각 서비스별 홈페이지'*에도 모바일 서비스 개시를 안내하여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포털
-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유아학비 지원 포털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로 문의해도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등 3종 모바일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신청 활용도가 높은 초중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2월 6일(예정) 사전신청 접수 개시 이후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으로 인해 주민센터의 방문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가능한 신청인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 다만,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당일(2월 1일)에는 접속자의 일시적 폭주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비스 개시 당일을 피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

2월 직원조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 결의

“설 명절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아 걱정과 우려 속에 많이 가리앉아 있어서 반전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가 반전의 선두에 섰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은 1일 2월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훈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설의 화두는 탄핵 후 정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정치 돌아가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불안한 정국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신 의장은 또 “경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면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하소연에서부터 부동산 걱정, 금리 걱정, 사드로 인한 관광객과 중국자본 투자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등 온통 걱정거리뿐이어서 안타까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우리 도의 현안인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 하면서, “이처럼 걱정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제348회 임시회에서 도민 중심의 의정으로 불안을 해소해 드리자.”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이어 “1월이 올 한해 계획을 세우는 달이라면, 2월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달”이라고 말하며 “업무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하고 “우리의 의정목표인 공감·소통·창조의정의 각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또 “며칠 후면 제348회 임시회가 개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점 지적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선진 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도 민들의 입장에서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난해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 덕택에 청렴도가 1등급 상승하고, 순 위도 4계단 올랐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청렴도 1등급을 기필코 달성하자.”며 직원들을 독



려했다.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후반기 의정이 출범하면서 세운 의정혁신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중점 핵심과제들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제10대 후반기 의정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 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 정을 구현해 달라.”며 훈시를 마쳤다.

한편 2월 정례직원조회는 ‘2017년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를 주제로 치러졌는데, 사 무처 직원들은 신관홍 의장에게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 탁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다섯 가지 항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서’를 결의했다.

의정역량, 사무처 직원들이 높인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전문가 초청 연찬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은 우리 스스로부터 높인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들이 스스로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60여 명은 2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회는 올 상반기 인사이드에 따라 전입한 19명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도의회 위상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내용도 직원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규칙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및 자치 입법 실무 등을 주 제로 삼았다.

연찬회는 유태동 법제처 법제관, 강인태 도의회 법제심사담당이 나서 안건 관련 및 입법 실무에 대해 강의 했으며, 이완구 소통강사와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찬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개최해 왔는데, 올해도 상·하반기에 걸쳐 의정 활동 전문성 향상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정소식]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소식지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의정활동에 대한 따듯한 쓴소리, 제주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과 이야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메일 : redlight17@korea.kr

전화 : 064-741-2235
(제주의정소식 발간 담당자)

제주의정소식 구독 신청 안내

『제주의정소식』은 월간지입니다.

『제주의정소식』의 구독을 원하는 분은 전화(064-741-2235) 또는 이메일(redlight17@korea.kr)로 신청해 주세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